

민중권력 쟁취하여 3차대전 저지하자!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2024년 11월 9일



www.k-rev.org
문의 010-4725-3677

제3차 세계대전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 유수의 인류학자겸 역사학자 에마누엘 토드(프랑스인)는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몇 달 만인 그해 6월에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은 그해 12월25일 성탄절에 “지금엔 제3차 세계대전 중입니다”는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갑자기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구상에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미 2년 반 이전에 발발한 미-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하나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1941년 히틀러의 소련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이미 발발했듯이 제3차 세계대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발발한 제3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편에 참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나토가 전쟁비용을 대주는 것은 물론 무기를 보내고, 독일 총리 솔츠가 무심결에 폭로했듯이, 그 무기를 조작할 군사요원을 보냄으로써 그 전쟁은 이미 러-우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나토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된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 영토·패권 쟁탈전이다.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그러하듯이 제국주의 세력들 상호간의 경제영토 쟁탈전인 동시에 세계 패권 쟁탈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중-러(상하이협력기구)와 미

-나토 사이의 세계정치경제 패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호도하듯이 권 위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미 제국주의가 호도하듯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전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에마누엘 토드는 러시아를 권위적 민주주의로, 미국을 자유주의적 과두제로 규정했음을 주목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 미국이 스스로 민주주의 나라라고 강변하면서 민주주의 나라 러시아를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일 것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제3차 세계대전의 일부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또 어떠합니까? 이 전쟁은 발발 당시인 2023년 10월7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처럼 비쳐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과 이른바 서방이 있다는 것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뒤에는 예멘,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란 등 저항의 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두 개의 중동 지도를 들고 선동했듯이 이란-레바논-예멘 저항의 축이 존재하는 ‘저주’의 중동이나 이들이 절멸된 ‘축복’의 중동이나를 둘러싼 국제전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통제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이나 중화 제국주의가 통제하는 일대일로냐를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 경제영토쟁탈전입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미 제국주의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구축하고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산유국들과 이스라엘을 화해·수교하게 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을 고사시키려 했기 때문에 발발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다음 전쟁터는 동아시아!

중국은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대만의 본토 귀속 즉 ‘하나의

중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는 겉으로는 이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대만 독립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본토에 귀속 되면 중국이 이 해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군은 오키나와와 필리핀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태평양 도서들을 견인하여 태평양의 미국 지배권에 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의 제해권 확보 또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 구축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 바다를 자기들의 사실상의 영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맞서 미 제국주의는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이 해역을 자신의 지배권 아래 두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해역은 미·중 두 강대국 사이의 패권쟁탈전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가 유일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현상(現狀)변경 반대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세력관계에 조응하지 않는 군사적 상황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변경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 자연적 추세를 막고 현상(現狀)을 유지하고자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미일은 11월3일 미국 핵 폭격기 B-1B를 동원한 가운데 제주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5일 다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핵탄두 탑재 가능)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북한이 도발한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위기는 금년 초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함으로써 더욱 가팔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한미가 2023년 4월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협력하는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2023년 8월18일에는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갖고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의 준군사동맹 체결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중순에 러시아 연해주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금년 6월19일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한미일 준군사동맹이라는 도발에 대한 비상한 대응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침략전쟁 계획에 남한의 정치세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금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며 ‘자유통일’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준군사동맹 체결과 합쳐서 보면 이것은 전쟁을 통해 흡수통일 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야 미 제국주의 전쟁광 바이든의 꼭두각시라고 칩시다. 그렇게도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에 대립하는 민주당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 성토한 적이 있습니까? 한미일 준군사협정 체결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 핵전쟁 기획에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동조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과 변혁으로 받아치자!

이 전쟁은 자본주의 현 단계인 제국주의가 자본의 더 많은 이윤 착취를 위해 벌이는 전쟁으로서 그 목적과 동기 자체가 아주 추악합니다. 이 전쟁은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수천만 나아가 수억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전쟁은 지구촌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인류가 애써 이루어 낸 경제적·문화적 업적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무조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중지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전쟁을 도발하는 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및 동아시아 전쟁기획에 가담하고 있는 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정권을,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정권을! 그리고 집권당이 아니지만 제3차 세계대전에 동조하는 정치세력 역시 타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야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뿌리 뽑으려면, 자본주의적 착취가 제국주의를 불러오고 그 제국주의가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혁명·변혁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로 혁명·변혁하든, 부분적으로 노동계급과 민중이 정치권력을 쟁취·행사하는 급진적 민주주의로 혁명·변혁하든!

개혁·개량이 아니라 혁명·변혁으로 펼쳐나서자!

선진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있다.

일본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유럽’ 운운하던 유럽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이윤을 저하 경향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던 영국은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지난 7~8월 무슬림을 혐오하는 극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앞서 영국에 노동당이 집권했습니다. 영국 수상 키어 스타머는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찾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제 스톱 세도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이런 전쟁광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전쟁 이외에는 영국 자본주의를 회생시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회민주당 총리 솔츠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쟁자금을 지원하고 자국의 군비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점자본 역시 전쟁 이외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굴러 떨어지는 독일경제를 회생시킬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경제는 2023년 -0.3% 성장했고 2024년에도 비슷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축적이 어려워지자 독일 사회민주당 역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개량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주구가 되어 자국 노동자와 인류를 전쟁의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택 사회화(임대주택 몰수)를 요구하는 베를린 시민의 주민투표 결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본주의도 쇠퇴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일본을 앞질렀다고 들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취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천민자본주의적 초과착취와 파쇼적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은 이 지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자본주의가 수출주도와 천민적 축적으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미·서구 선발자본주의가 쇠퇴하고 그것과 연동되어 중국 같은 후발 자본주의도 침체하는 속에서 수출 주도형 한국 자본주의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수출에, 그것도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내수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저조한 상태이므로 성장률은 향후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루비니 교수가 경고한 ‘초거대위협’(인구노령화, 지정학적 위기, 탈세계화, 스태그플레이션, 금융붕괴 등이 중첩된 다중위기)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본이 걸어간 쇠퇴의 길을 뒤따라갈 것입니다.

혁명과 변혁만이 희망이다.

이런 비관적 경제상황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실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물가상승과 임금억제로 실질임금은 더 줄어든 것입니다. 청년들은 더 취업난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더 성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더 가난하고 더 고독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살자가 더 늘고 우울증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약과 범죄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다 정치는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노동자·민중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기만적인 보수정당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며, 그나마 차선이 아니냐며 기대를 걸 땀니까? 아니면, 극소수정당인 진보개혁 정당들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진보개혁 정치 30년에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상의료, 무상교육조차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독점재벌 해체, 노동악법 철폐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혁·개량주의 진보정치로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줄일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시기에는! 이제 혁명과 변혁의 진보정치가 아니고는 어떠한 개선도 실현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임기 반환점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4대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이를 다시 밀어붙이려고 있습니다. 이 4대개혁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의료마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겠다는 의료개혁, 더 내고 덜 받게 하자는 국민연금개혁, AI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교육개혁 아닙니까? 이런 자유주의 개혁을 파탄내려면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내걸린 사회대개혁이 아니라 반(反)자본 급진 민주주의 혁명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지향인 사회주의 혁명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개량적 사회대개혁이 아니라 변혁적 반(反)자본 급진 민주주의 혁명이 현 시기 노동운동의 최소강령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급진민주주의 혁명 강령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 사회양극화의 주범 독점재벌을 해체한다. 독점은 금지한다.

헬조선 대한민국에서는 소수 독점재벌이 독점이윤과 독점지대를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정치를 통째 지배함으로써 사회양극화와 기층민중 궁핍화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려면 이 독점재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독점 자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구글' 처벌을 보십시오.

둘. 파쇼억압기구 해체하고 이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둘-1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중앙정보부 후신, 국가비밀경찰 국정원은 군사파쇼의 유물입니다. 이 국가비밀경찰이 휘두르는 법적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둘-2 경찰을 자치경찰로 교육자치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국가경찰도 그 수장을 선출제로 하여 민중이 통제해야 합니다.

둘-3 검사와 판사는 선출로 민중이 통치당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같은 사법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배웁시다.

셋.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정치활동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공무원과 군인, 노동조합,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중의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현 정당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넷. 전면적 사회보장을 실시한다.

넷-1 주거권은 전·월세 주택 재분배와 택지국유화로 보장해야 합니다.

넷-2 건강권은 의료 국영화 및 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병주고 약주는 식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넷-3 노후는 기초연금 월100만원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소요 재원 100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자 증세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조한다.

교육의 목표는 자본을 위한 인재와 임금노예 양성이 아니라 만인의 인간해방으로 돼야 합니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학교를 국영화하고 또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 평등사회를 위해 노동과 자본 간 양극화와 노동 내부 양극화가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온갖 양극화의 주범 독점재벌 해체와 더불어 노동악법을 철폐한다.

일곱. 이상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 보수양당독재를 타도하고 민중권력을 수립한다.

이상과 같은 강령의 실천을 보수를 진보라고 기만하는 보수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겨서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난립해 있는 군소 진보정당들에게 맡겨서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나 전환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노동자·민중들이 떨쳐나서서 국민권력이나 시민권력이 아니라 민중권력을 쟁취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새로 제정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강령적 내용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를 통한 개헌에 의한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단축 같은 땀질은 허용하지만 국민이 제헌을 할 권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없게 대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계급의 독재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헌법, 진정한 민주주의 헌법 제정 없이는 민중은 설사 민중권력을 쟁취해도 합헌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헌법 제정은 급진민주주의 혁명에서 필수적입니다.